



이 상 영

보건복지가족부 전(前)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

장애인 복지의 세계적 추세는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방향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00년 등록장애인이 96만명에서 2차례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2007년 200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취학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이 취업 시 차별 경험, 교통수단이용의 어려움, 편의시설의 부족 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동안 장애인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복지중

합대책 수립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였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대상 범위 및 금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복지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 사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확대됨에 따라 그 발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정책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부는 향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해소 및 권익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

련하고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일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2008년 4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 마련 및 모니터링의 차질 없는 준비와 UN장애인 권리협약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고용·교육·이동 및 편의시설·문화·정보·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어 향후 동 법이 원활히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판정체계 및 인프라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장애인 복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 제3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고자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활의료체계, 생활시설 및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개편해 나가고 그동안 장애인이 미비하다고 느껴왔던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능동적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하여 일을 통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즉, 기존의 장애수당과 함께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장애유형별 신규 직종 및 고급직종 개발·보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를 보다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이제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비장애인들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의 정의는 개인의 불편함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적극적 참여가 필수 전제조건이 되며, 무엇보다도 민간부분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향후에도 우리부는 장애인복지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토대의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능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모델과 방향 제시 및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